

‘난방비’ 이어 광주 공공요금 들썩... 시민 삶 휘청

택시요금 최대 1000원 인상 검토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전국 최저
4월용역거쳐 하반기 인상 가능성
공영주차장 시기조절·버스 ‘동결’

올해 ‘난방비 대란’에 이어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시민들의 민생고는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택시 기본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 택시의 기본요금은 지난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 뒤 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 택시 업계는 대전, 대구, 울산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인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LPG 가격 폭등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도 오는 3월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시민 공론 과정을 거친다. 현재 3300원에서 최대 4300원까지 1000원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의회 의결 청취 기간을 거치고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최종 인상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30일 광주 서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입주자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올해 도시가스 요금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정부의 도매요금이 작년 한해 40%가량 오르면서 현재 전국적인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

자체가 결정하는 소매요금까지 올리는 것이 시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현재 시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고, 업계에서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된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광

주시의 가정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 MJ(메가줄)당 1.115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광주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산업 시설이 많은 편이 아니고 인구 밀집도도 높은 편이 아니어서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며 “주택용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된 상태여서 판매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는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는 내달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기준, 1급지당 기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600원 올리는 내용이다. 시는 인상 배경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5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지난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 시기를 2월1일에서 5월1일로 3개월 늦췄다.

서울발 버스비 인상 사태로 ‘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 인상도 우려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주시의 버스요금 인상안은 검토된 것이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적자폭은 극심한 상황이지만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선 업계의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 요금 인상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돼 민생이 어렵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과 업계의 어려움 청취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 서구,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

100개 시설 5000만원 지원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철 취약계층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회복지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도시가스 할인율을 인상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도 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 및 어린이집과 경

로당, 장기요양기관 등에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33개소를 비롯해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전월대비 인상폭 기준으로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5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서구는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난방비 급등... 道,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신청 기한 2월 말까지 연장키로
전기·도시가스·연탄 4월까지 사용

전남도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3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인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

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30일에서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6822가구에 34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박간재 기자

중앙일보의 새로운 슬로건

더 중앙에 두다

현장의 진실을, 통합의 가치를,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겠다는 실천의지를 담았습니다.
그 중심에 ‘독자를 중앙에 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발품을 팔아 취재한 팩트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진짜 뉴스를 발굴하겠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무분별한 편가르기, 맹목적인 이념 대립 탓에 합리적인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상과 대화로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할 공론장을 복원하겠습니다.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성장 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은 요원합니다. 포퓰리즘에
맞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편법과 탈법을 견제하는 감시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